'황토 공방'

남해안 적조 확산 … 해수부 "황토가 최선" vs 전남도 "예산만 낭비"

고흥~여수 소강국면 … 경남은 동해안까지 번져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적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황토 살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적조 방지로 황토 살포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전남도는 황토 이외의 방법으로 적조를 막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고흥~여수 일대를 덮친 적조는 양식어가 등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소강 국면이다.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조 발생상황 및 추진대책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황토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적조 대책"이라며 "지자체의 적조방지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즉각 지원해 모자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황토 살포 무용론'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손 차관은 "올해 적조 발생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며, 5년 만에 동해에서도 적조가 발생하는 등 예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적조 생물이 수심 10m 이하의 저층까지 확산돼 저층수를 끌어올려도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라면서 "통상 적조 발생 이후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는데 보름가량이 걸렸는데 올해는 5일 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황토가 아닌 점토를 살포하고 있지만, 점토는 황토보다 10배 비싸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황토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수 적조현장을 방문한 뒤 박준영 지사와 면담을 할 예정이었던 손 차관은 적조 피해가 심한 경남 통영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이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황토 살포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적조를 막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

전남도 정병재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2차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큰 황토 대신 전해수 처리기 등을 이용한 적조 퇴치에 모든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해수는 전기적인 힘을 가해서 얻어지는 물이며 살균, 소독, 세정 등의 효과가 있다.

전남도는 전해수 발생기 20대를 임대해 적조 발생 우려 지역에 투입하고, 선박의 물살을 이용한 이른바 '물갈이 작업'으로 방제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선박 유류비 지원, 산소 공급기 지원 등을 위해 8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적조 방제를 놓고 해수부와 전남도 사이에 갈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여수와 고흥 등은 비로 수온이 낮아져 적조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경남 통영과 거제 등지에서는 1200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해 61억원의 피해가 났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8일 전남도의 적조 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 금지 방침에 대해 "황토를 뿌리지 않아 발생한 적조 피해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적조피해에 관한 긴급브리핑을 갖고 적조 발생상황과 추진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국제행사성공추진협의회 노성대 회장 등 광주지역 주요 인사 11명은 29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면담하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국제행사성공추진협의회 제공〉

"세계수영선수권 정부 지원하라"

광주 주요 인사 11명 여야 인사 면담

광주시 국제행사성공추진협의회 노성대 회장 등 광주지역 주요 인사 11명은 29일 정부와 여야 정당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인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을 면담하고, 수영대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문제는 문제대로 처리하되 유치한 것은 유치한 대로 정부가 지원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인사는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면담하고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으며, 황 대표는 광주지역 인사들의 요구 사항을 문체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을 만나 민주당 차원의 대회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건의문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청와대 관계자의 안내로 민원함에 '대통령에게 드리는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국무총리실, 문체부장관실을 방문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불교계도 검찰 수사와 정부 지원의 분리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 불교승보회, 광주·전남 불교신도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가적 대사인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를 환영하고 차별 없는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당 "세계수영대회 적극 돕겠다"

대통령공약 우선순위 제시도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파문과 관련해 29일 "광주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신임 이정재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수영연맹(FINA)이 2019년 대회지로 광주를 선정한 이상, 그간의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여하한 처분이 가해지더라도 광주시민으로서는 행사를 성공하게 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늦은 감은 있지만 강 시장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며 환영한다"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하루빨리 봉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또 "광주시는 정부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하고, 민주당이 있느니, 정치적 탄압이니, 소외니 자극적인 정치적인 발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차기 정권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당은 이어 30일 열리는 새누리당 지역대선공약추진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 지방공약 중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억 원의 용역비 예산 반영을 정부에 요청하고, 최근 광주시가 요청한 ▲국립 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 설립 ▲문화기술연구원 설립사업 예비타당성 신청 ▲디지털 콘텐츠사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지역 공약의 우선 순위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구축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지원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추진 순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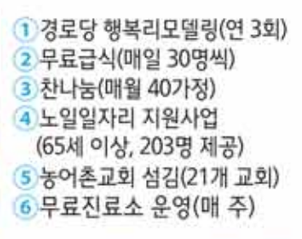
채 규 현 담임목사

더욱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중앙교회를 위해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행복을 심는 **광주중앙교회**는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경로당 행복리모델링, 무료급식, 노인 일자리 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역아동 비전트립, 무료진료소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채규현 담임목사와 온 성도들은 행복한 지역사회를 꿈꾸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역주민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담임목사·당회·성도 일동

① 경로당 행복리모델링(연 3회)
② 무료급식(매일 30명씩)
③ 찬나눔(매월 40가정)
④ 노일일자리 지원사업 (65세 이상, 203명 제공)
⑤ 농어촌교회 섬김(21개 교회)
⑥ 무료진료소 운영(매 주)



⑦ 해외선교지원 (12개국 23명 지원)
⑧ 출산후엄마학교
⑨ 나눔대축제참가
⑩ 연말 행복나눔 프로젝트
⑪ 중앙나누리문화센터 (연 300명)
⑫ 호스피스사역